

태국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시사점

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hlee@kiep.go.kr, 044-414-1134)



차 례

1. 서론
2. 태국 정치 지형 및 총선 결과 분석
3. 태국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분석
4. 시사점

주요 내용

- ▶ 태국 정치권은 2006년 탁신(Thaksin) 전(前) 총리 사임 이후 친(親)탁신-친(親)군부 진영 간 갈등과 정정 불안이 지속되어왔으며, 최근 개혁 성향 전진당(MFP: Move Forward Party)의 합류로 친탁신-친군부-개혁 3개 진영의 경쟁 구조가 형성됨.
 - 태국의 정치 지형은 친탁신 정당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과 친군부 진영이 경쟁하는 구조였으나, 2019년 총선에 개혁 성향의 미래당(FFP: Future Forward Party)이 등장해 친탁신-친군부-개혁 3개 진영의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2023년 5월 총선에서는 미래당을 잇는 전진당이 최대 의석을 차지함.
- ▶ 2023년 5월 총선에서는 개혁 성향의 전진당이 151석으로 최대 의석을 차지했으나 총리 선출 선거에서 상하원 과반의석(376석) 확보에 실패했으며, 제2당인 친탁신 계열 프어타이당의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후보가 제30대 총리로 당선됨.
 - 전진당의 총리 선출 실패 후 제2당 프어타이당이 친군부 및 보수 정당과의 연정을 구성해 총리 선출에 성공했으며, 전진당은 프어타이당의 친군부 및 보수 정당과의 연정을 비판하며 야당으로 남음.
- ▶ 태국 신정부는 정정 불안, 성장동력 부족,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경제 부진 상황에서 출범해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성장동력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태국은 아세안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이나 신성장동력 부족과 정정 불안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아세안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임.
 - 태국 신정부는 1만 바트(약 38만 원) 전자지급 지급, 에너지 비용 경감 등의 경기 부양책은 물론 FTA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등 대외정책도 적극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 ▶ 향후 한-태 양국은 미래산업, 친환경 등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협력 의제에 적극 반영하되, 양국간 범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태국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FTA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한국과의 FTA 협상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2022~27년 한-태 공동행동계획에 채택된 미래산업, 친환경 등을 중심으로 협력안을 지속 논의하되 범정부 대화 채널인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서론

- 태국은 2006년 탁신 전 총리 사임 후 친탁신-친군부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한 정정 불안이 지속되어 왔으며, 2019년 총선을 기점으로 기존의 양분된 경쟁 구도에 개혁 정당이 합류함.
 -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친군부 정권이 유지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정권이 안정되었으나, 2019년 총선으로 군부 정권 연장과 개혁 정당인 미래당(FPP: Future Forward Party)의 해산을 계기로 민주화와 군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세 손가락 경제'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지속됨.
 - 2023년 5월 총선은 전통적인 친군부, 친탁신 진영 이외에 수준 높은 개혁과 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전진당이 합류한 형태로 치루어짐.

- 2023년 5월 14일 총선 후 신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다수의 과정을 거쳐 8월 22일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후보가 태국의 제30대 총리로 당선됨.
 - 하원 50석을 선출한 5월 총선에서는 개혁 성향 전진당(MFP: Move Forward Party)이 151석으로 제1당, 친탁신(Thaksin) 정당 프어타이당은 141석으로 제2당을 차지했으며, 선거 직후 양당 주도로 연정을 구성해 정권을 창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음.
 - 하지만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의원이 상하원 합동 총리 선출 선거에서 과반 의석(376석) 확보에 실패하고, 언론사 지분 보유금지 규정 위반으로 의원직도 정지되자 총리 선출 주도권이 제2당인 프어타이당으로 넘어감.
 - 이후 프어타이당 주도의 11개 정당 연정이 8월 22일 총리 선출에 성공했으며, 제1당인 전진당은 친군부 진영과의 연대를 비판하며 연정에서 이탈해 야당으로 남음.

- 태국은 성장동력 부족, 정정 불안, 코로나19 등 다양한 이유로 아세안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은 상황이며, 최근 코로나19 충격에서도 회복되지 않아 경제 회복이 신정부의 최대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세타 신임총리는 9월 11일 의회 시정 연설에서 신정부가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도 1만 바트(약 38만 원) 전자지갑 지급, 에너지 가격 인하 등 단기 경기부양책이 주목 받고 있음.
 - 단기 경기부양책 이외에도 소득 증진, 기회 확대, 삶의 질 개선 등 주제별로 다수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본고에서는 2023년 5월 총선 이후 태국의 정치 지형 변화 및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태 교류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함.

2. 태국 정치 지형 및 총선 결과 분석

- 태국은 2006년 탁신 전 총리 사임 이후 친탁산-친군부 세력 간 갈등으로 인한 정정 불안이 지속되어왔으며, 2017년 개헌으로 군부의 집권이 유리한 정치 지형이 형성됨.
- 탁신 전 총리 사임 이후 2007년 친탁신계 PPP(People Power Party)의 승리, 2011년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 승리 등으로 정권 탈환에 성공한 바 있으나, 총리 대다수가 겸직금지, 선거법, 권력남용 등의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함.
- 2014년 19번째 군부 쿠데타 후 2017년 개헌을 통해 군정 회의체 국가평화안정회의(NCPO: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가 상원 250명 임명권을 독점해 총리 선출 상하원 합동선거 과반수 376석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함.¹⁾
 - 2019년 총선에서 친탁신계 프어타이당이 137석으로 하원 최대 의석을 차지했으나, 상하원 합동 376석 확보에는 실패해 친군부 정당 팔랑쁘라차랏당(PPRP)이 집권함.

글상자 1. 태국의 주요 정치 이슈(2006년 9월~2023년 8월)

2006년 9월	18번째 군부 쿠데타 발생, 탁신 총리 사임 및 과도내각 수립
2007년 12월	총선 실시, 친탁신계 PPP(People's Power Party) 정권 재창출, 제25대 싸막(Samak) 총리 취임
2008년 9월	공직자 겸직금지 규정 위반 싸막 총리 사임, 제26대 쏘차이(Somchai) 총리 취임
2008년 12월	2007년 총선 불법선거 혐의 PPP 해산, 제27대 민주당 아피싯(Abhisit) 총리 취임
2009년 4월	친탁신 UDD 대규모 반정부 시위, 아세안+3 및 동아시아정상회담 취소, 국가비상사태 발령
2010년 5월	친탁신 단체 UDD 방콕 도심 시위, 군 병력 투입 진압, 대규모 유혈사태 발생
2011년 7월	조기 총선 실시, 친탁신 프어타이당 승리, 제28대 잉락 총리 취임
2013년 12월	사면법 입안으로 반정부 시위 심화, 친정부·반정부 시위대 충돌로 유혈사태 발생
2014년 5월	19번째 군부 쿠데타 발생, 제29대 브라우트(Prayut) 총리 취임, 정치·정당 활동 금지
2016년 8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군정기구 NCPO 상원 250석 임명권 확보(2017년 헌법)
2019년 3월	총선 실시, 친탁신계 상하원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 군정 연장
2020년 8월	반군부, 왕실 개혁 요구 '세 손가락 시위' 발생
2022년 12월	브라우트 총리 여당 팔랑쁘라차랏당(PPRP) 탈당, 루엠타이쌍창당(UTN) 입당
2023년 5월	총선 실시, 전진당(MFP) 151석 제1당, 프어타이당 141석으로 제2당, 친군부 정당 부진
2023년 8월	제30대 총리 선출 투표 프어타이당 세타 후보 과반의석 확보 성공

1) 태국 의회는 상원 250석, 하원 500석으로 구성되고, 총리 선출을 위해서는 상하원 합동선거 과반수 376석이 필요하며, 2017년 개헌으로 상원 250석 중 6석은 육·해·공 사령관 등 군부 인사, 194명은 국가평화안정회의(NCPO) 인사위원회 추천 400인 후보 중 임명, 50석은 선관위 추천 200명 중 NCPO가 임명해 사실상 군정 회의체인 NCPO가 독점하는 구조임.

- 2019년 총선에서 친군부 팔랑쁘라차랏당이 집권 연장에 성공했으나, 친탁신 프어타이당 이외에 개혁 성향의 미래당이 81석을 보유한 제3당으로 등장해 정치 지형이 변화함.
 - 2019년 총선 이전에는 태국의 정치 지형이 친탁신-친군부 형태로 양분되었으나, 2019년 총선에는 개혁 성향의 미래당이 등장해 3개 진영이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됨.
 - 2020년 「정치자금법」 위반을 사유로 미래당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미래당 해산 이후 다수 인사들이 전진당으로 입당해 미래당이 누려온 대중적 지지를 전진당이 물려받음.

그림 1. 태국의 정치 지형 변화



자료: 저자 작성.

- 2023년 5월 14일 총선 결과 개혁 정당인 전진당이 151석으로 최대 의석을 차지하며 제1당으로 부상함.
 - 2023년 총선에서는 전진당(MFP: Move Forward Party) 151석,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 141석 등 주요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범여권 친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과 루엠타이쌍창당은 각각 40석 36석으로 소규모 의석 확보에 그침.
 - 전진당은 젊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수도 방콕 33개 선거구 중 32개를 석권했으며, 프어타이당 후보가 당선된 1개 선거구에서도 단 4표 차이로 낙선함.

표 1. 태국의 2023년 총선 정당별 의석 확보 개요

정당명	지역구	비례	합계	비고
전진당(พรรคก้าวไกล, Move Forward Party)	112	39	151	군부퇴진·왕실개혁
프어타이당(พรรคเพื่อไทย, Pheu Thai Party)	112	29	141	친탁신
퐁짜이타이당(พรรคภูมิใจไทย, Phumchai Thai Party)	68	3	71	보수·포퓰리즘
팔랑쁘라차랏당(พรรคพลังประชารัฐ, PPRP)	39	1	40	친군부(2019년 집권)
루엠타이쌍창당(พรรครวมไทยสร้างชาติ, UTN)	23	13	36	친군부(2021년 창당)
민주당(พรรคประชาธิปัตย์, Democrat Party)	22	3	25	범보수, 반탁신
기타	24	12	36	10석 미만 정당 합계

자료: 저자 작성.

- 제1당인 전진당이 7월 총리 선출에 실패한 후 제2당인 프어타이당이 친군부 및 보수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 총리 선출에 성공함.
 - 총선 이후 7월 13일 전진당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후보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과반 의석 376표 확보에 실패했으며, 2차 투표 직전 피타 후보의 의원 자격이 정지되어 정권 창출에 실패함.
 - 이후 제2당 프어타이당이 친군부 및 보수 정당을 포함한 11개 정당 연정을 구성해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단독 후보로 8월 22일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찬성 482표로 집권에 성공함.
 - 세타 총리는 2022년 프어타이당에 입당한 정치 신인으로,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Paetongtarn), 전 법무부 장관 차йка셈(Chaikasem)과 함께 총리 후보 3인 중 한 명으로 활동해옴.
- 전진당은 총선 과정에서 반군부 및 정권 교체에 대해 프어타이당과 방향성을 함께하는 입장이었으나, 프어타이당의 친군부 및 보수 정당과의 연정을 반대하며 야당으로 남음.²⁾
 - 전진당은 프어타이당의 친군부 및 보수 진영과의 연정 구성에 대해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향후 야당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3. 태국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분석

- 태국은 아세안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이나 신성장동력 부족, 정정 불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 부진으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옴.

그림 2. 태국의 주요 정치 이슈 및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IMF(www.imf.org) 통계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2) Thai PBS(2023. 8. 23), "Move Forward becomes main opposition party."

■ 세타 신임 총리는 9월 11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태국의 경제상황을 ‘환자(Sick person)’로 진단하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국정 과제를 발표함.

- 세타 총리는 2022년 2.6%, 2023년 상반기 2.2%에 머물러 있는 태국의 저성장 상황을 ‘환자’에 비유하며, 경기 부양책 중심의 단기 정책과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중심의 중장기 정책으로 구성된 국정 과제를 발표함.
- 단기 정책은 16세 이상 전 국민 1만 바트(약 38만 원) 전자지갑 지급, 에너지 비용 절감, 입국 비자 면제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구성됨.
- 중장기 정책은 소득 증진, 기회 확대, 삶의 질 등 다양한 정책들로 구성되며, 소득 증진과 기회 확대 정책은 기존 정부정책과 기본적인 방향성을 공유하나 삶의 질 개선 분야에서는 군대 구조 조정, 양성평등 등 다소 개혁적인 정책도 포함됨.

표 2. 태국 신정부의 주요 정책안 개요

구분	주요 정책	정책 목표
단기 정책	경기 부양	· 1만 바트(약 38만 원) 전자지갑 지급, 총 5,600억 바트(약 21조 원)
	긴급 시행	· 농민, 가구, 중소기업 부채 경감 · 에너지(전기, 가스, 석유) 가격 인하 · 관광산업 활성화(비자 비용 경감, 특정 국가 비자 면제 등) · 2017년 헌법 개정 공청회, 가이드라인 수립
중장기 정책	소득 증진	· 상품, 서비스 수출 확대 및 FTA 추진 · 녹색, 첨단 산업 등 성장동력 개발 · 스타트업 육성, 수송 인프라 개발 · 농림수산업 소득 증진
	기회 확대	· 토지소유 문서화 제도 확립 · 공공 부문 탈규제 및 지원(Support) 기관화 · 디지털 정부 추진 · One family, one soft power(고소득 숙련 인력 양성) · 교육 개혁, 연구 활동 및 전생애 교육 지원
	삶의 질 개선	· 군대 구조 조정 및 모병제 추진 · 마약 거래 단속 확대 및 치료 지원 · 대기오염 해결 · 보편적 의료제도 강화 · 양성평등(동성 결혼) 법제화

자료: Aekarach S.(2023. 9. 12), "Nation like a sick person," Bangkok Post 내용을 활용해 저자 작성.

■ 태국 신정부의 주요 정책 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정책은 1만 바트 전자지갑 제공정책으로, 최근 태국정부의 긴축 통화 및 재정 기조에 변화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태국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0.50%→2.25%까지 인상하고 재정긴축 기조를 유지해 정부지출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중임.
- 긴축 재정이 시작된 2022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는 감소했으나, 공공부채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GDP 대비 40%에서 최근 60% 이상으로 증가해 부채를 확대할 여건이 양호하지 않음.

- 태국 정책당국은 1만 바트 전자지갑 정책이 2024년 경제성장률에 약 3%의 인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채권 발행보다는 정부지출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짐.³⁾

표 3. 최근 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2020~23년 2/4분기)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간	Q1	Q2	Q3	Q4	Q1	Q2
가계소비	-0.8	0.6	6.3	3.5	7.1	9.1	5.6	5.8	7.8
정부지출	1.4	3.7	0.2	8.2	2.7	-1.5	-7.1	-6.3	-4.3
총고정자본형성	-4.8	3.1	2.3	1.0	-0.9	5.5	3.9	3.1	0.4
수출	-19.7	11.1	6.8	11.9	7.8	8.7	-0.7	2.1	0.7
수입	-13.9	17.8	4.1	4.4	7.3	9.5	-4.8	-0.9	-2.4
GDP	-6.1	1.5	2.6	2.2	2.5	4.6	1.4	2.6	1.8
재정수지(%/GDP)	-6.8	-5.5	-2.7	-2.2	1.8	-1.2	-9.1	-5.3	0.7
공공부채(%/GDP)	51.2	59.9	60.9	60.7	61.0	60.5	60.9	61.4	61.6

자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https://www.nesdc.go.th>) 및 EIU Country Data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 상기 정책 이외에 프어타이당의 핵심 공약인 다수의 소득 증진 관련 정책의 효과와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프어타이당은 총선 과정에서 대졸 초임 월 2만 5,000바트(약 93만 원), 최저임금 600바트/일(현재 수도권 최저임금 약 350바트/일), 가구당 소득 2만 바트 보장 등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함.
- o 2019년 총선에서도 여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이 최저임금을 400~425바트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시행되지 못함.

4. 시사점

■ 태국 신정부는 다수의 대외정책 중에서도 FTA를 통한 무역 확대 조치를 가장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도 태국과의 양자간 FTA를 통한 추가 자유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태국은 최근 EU와의 FTA 협상 재개를 시작으로 FTA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FTA 체결 범위를 기존 18개국, 무역 비중 약 60%에서 2027년까지 50개국 이상(한국 포함), 무역 비중 80% 이상으로 확대 하는 것을 목표로 함.⁴⁾
- 한국은 2007년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다수의 아세안 국가와 양자 FTA를 통해 추가 자유화를 진행해 왔으나,⁵⁾ 태국과의 양자 FTA는 2014년 CEPA 공동연구 이후 진전이 없어 향후 한·태 양자간 주요 협력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

3) Wichit. C, Somruedi B, Suchit L.(2023. 8. 13), "Probing the B10,000 digital handout," Bangkok Post.

4) Phusadee. A.(2023. 5. 18), "Department eager to push free trade negotiations," Bangkok Post.

5) 2023년 9월 기준 태국의 FTA 체결 상황은 발효 15건, 서명 1건, 협상 9건이며, 한국은 싱가포르(2006년 발효), 베트남(2015년 발효), 캄보디아(2022년 발효), 인도네시아(2023년 발효), 필리핀(2023년 최종서명) 등 아세안 10개국 중 5개국과 양자 FTA를 체결했으며, 말레이시아와 협상을 진행 중임.

■ 태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화 전략을 지속 활용해온 국가로, 첨단산업·녹색·스마트·디지털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신산업 중심의 투자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태국은 2022년 하반기에 태국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이 채택한 ‘2023~27 투자 유치전략’을 통해 ① 신산업 공급망 ② 그린·스마트(EV, 디지털, 탈탄소) 전환 ③ 비즈니스 허브화 ④ 중소기업·스타트업 연계 ⑤ 포용적 투자 ⑥ 지역 발전 투자 ⑦ 해외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최근 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에 집중된 반면 태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나, 최근 금융·전기·전자 등에 대한 대태국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⁶⁾ 사실상 일본이 독점한 태국의 자동차 산업에 최근 한국 완성차 기업의 투자가 진행 중인 점도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음.⁷⁾

■ 향후 한·태 양국 정부는 2022년 수립된 공동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양자간 협력 의제를 지속 논의하되, 협력안 이행 점검 및 신규 협력안 채택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음.

- 한·태 양국은 2022년 정상회의에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공조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서 ‘2022~2027년 한·태 공동행동계획’을 체결함.
 - 동 행동계획은 ① 정치·안보 고위급 교류 확대 ② 교육·문화·관광 인적교류 활성화 ③ 보건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 ④ 미래산업 협력 및 상호 교역·투자 확대 ⑤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협력 ⑥ 지속가능발전 우수 사례 공유 등 6개 협력안으로 구성됨.
- 상기 6대 협력안 중에서도 미래산업,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지속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태국과는 2018년 제3차 정책협의회 개최 후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매년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처별 현안을 취합하는 형태로 의제를 채택해옴.
 - 향후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회 운영이 정례화될 경우 각종 범정부 차원의 협력사업 이행 점검과 신규 사업 채택을 위한 대화 창구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KIEP**

6) 2022년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 중 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4.4%, 32.0%, 16.6%에 달했으나, 태국의 비중은 1.6%에 그쳤음. 반면 2023년 상반기 태국의 국별 FDI 승인 실적은 중국이 1위(16.5억 달러)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14.8억 달러), 일본(14.6억 달러), 미국(5.9억 달러), 한국(5.8억 달러) 순으로 한국은 5위를 차지했으나 전년동기대비 631% 증가한 것이 특징임.

7) 매일경제(2023. 9. 6), 「단독 기사, 태국에 아세안 첫 공장 추진」.